

POLITICS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야, 윤 파면 총력전 “천막당사 24시간 체제”

전남도, 불법소각 집중 단속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투입

전남도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을 투입해 산립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계획을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남도는 입산 통제 14만 1000ha, 등산로 700km를 폐쇄했고, 그 외 지역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 감시를 위해 시군 부단 체장을 중심으로 읍면동 현장 예방 강화,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주말 산불 감시 활동 강화, 주민, 성묘객, 행사객 등과 직접 대면해 계도와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마을방송, 가두방송, 제논문자 등 산불예방 홍보 등도 실시 중이다.

산립 인접지 쓰레기·영농부산물·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해 진화장비 5만4000점 검교 출동 대응태세 점검을 마쳤다.

특히 봄철 지역 축제와 행사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한식과 청명절을 맞아 입산과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는 도·시군 합동으로 주말 공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지속되면서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 일원에 대해 산불 영향권 진입 여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27일 담양읍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4·2 재·보궐선거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도, 재·보궐선거 지원 담양군 사전투표소서 점검

전남도는 27일 담양군 문화회관에 설치된 담양읍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이날 투표 운영장비, 기표대, 투표 편의설비 설치 현황, 전기·통신장비 등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관계자들에게 원활한 선거인 동선 확보와 유권자 일시 집중 및 정전, 통신 장애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투표소 인근 소방안전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 서울·부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특이사항 전수조사 상황도 확인했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법정선거사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투·개표소 보안을 강화해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8~29일 진행된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전남에선 광양시 다 선거구(중마동)와 담양군(모든 읍면), 고흥군 나 선거구(과역·남양·동강·대서면)에 총 17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s://www.nec.go.kr)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탄핵 심판 지연에 장외 투쟁 수위 격상

현재 앞에서 여론전...철야농성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등 장외 투쟁의 강도를 한 단계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광화문 천막 농성과 현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농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현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했다.

또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정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역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현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원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현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지난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

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천막당사, 서초구 고등법원 등을 무대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과 현재 압박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황재하 대변인은 지난 26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6일)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여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등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100대 의혹 비리 국민특별검정단’ 김영호 단장은 지난 2월 말 김건희 석사 논문에 대해 속명여대가 표절 논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보당 정책위의장은 단식 농성 10일째인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재의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짐에 따라 곡기를 끊은 열흘이라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지난 26일 새벽 광화문 집회 현장에 도착한 농민의 트랙터 한 대를 폭력적으로 탈취하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보당 무기한 농성단은 이날 농성 2일차를 맞아 이른 아침 출근길과 점심시간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윤석열 즉각 파면’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원의 진보정당들도 거리에서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임시당사를 함께 운영 중인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상무집행위원회 등 당 대표단의 주요 회의와 업무 일정을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한편 차량을 이용한 정당 연설회도 준비 중이다. 이현규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경북 산불현장지휘본부 방문 김명록 전남도지사가 27일 경북 의성지하철센터에 마련된 산불현장지휘본부를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명록 전남지사 1인 시위 “헌재, 8대 0으로 윤파면 결정할 것”

김명록 전남도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는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며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헌재에서 기각이 되고 비상계엄을 수시로 통치 행위로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탱이 되겠냐”며 “헌재가 보수권 진보권 이 문제도 엇갈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제가 법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위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게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 ‘글로벌대학30’ 선정 위해 다시 뛰다

추진단 가동...대학과 긴밀협력·맞춤형 밀착 지원

광주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 글로벌대학 선정 실무추진단(TF) 회의’를 개최, 글로벌대학30 선정에 대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지역대학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각 대학의 혁신기획서 및 대표 과제 설명, 광주시-대학-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내실있는 대학 혁신기획서 작성과 이에 필요한 광주시 자료제공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협의했다.

광주시는 올해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글로벌대학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무회의 등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예비지정 준비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고 있다.

또 대표산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반도체, 메디컬스캐어 등 광주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분석하고 협의·조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추진(TF)단을 통해 교육부의 ‘2025 글로벌대학 추진방향’인 혁신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기획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장은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는 지역대학의 미래와 혁신이브 생태계 구축 등 광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현안이다”며 “올해 마지막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우리 지역대학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대학30은 올해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벌) 30곳을 지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학교당 5년간 최대 국비 1000억원(대학 통합 최대 15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0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이내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월 중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면 20개 내외의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한다. 7월 본지정 신청 후 8월 말까지 최종 10개 이내의 글로벌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 sky@

조인철,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법 발의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해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별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힐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고물가와 취업난, 주거 불안정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경험을 쌓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의 적극적인 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힐 것이 핵심이다. 이현규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친환경농업직불금 내달 30일까지 접수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이행여부 점검 후 연말 지급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

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가 농가당 5ha에서 30ha로 확대됐으며, 논 지급단가도 ha당 각 25만 원이 인상됐다. 논은 ha당 유기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이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 등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친환경영양분을 유지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된다. 올해는 예외로 2025년 신규 인증농가도 기간 내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영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전남도, CES 2026 도전 혁신기업 모집

에너지·디지털헬스 등 분야

전남도가 2026년 1월 6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에 참가할 기업을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전남도는 CES 2026에서 에너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 혁신기업의 전자제품과 신기술을 국제 무대에 선보일 방침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관람객이 체험할 공동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전자제품 및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거나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참가 분야는 에너지, 모빌리티, ICT 및 콘텐츠, 디지털 헬스, 스마트팜 등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